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서론

-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출산력과 인구변동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 ‘인구변천 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출산력의 변천은 근대 사회의 사회·경제적 힘에 의해서, 그리고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제도적 틀에 영향을 받음
  -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근대적 공업화와 도시화가 출산력 변천을 초래(김한곤, 1993)
  - 도시와 농촌 간의 출산력의 차이는 주로 생태환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때문(김두섭, 2007)
- 다른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큰 틀에서 이미 결정된 구조
  - 현재 시점의 인구구조는 이미 출생한 사람들의 구성비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50~100년의 추세는 이미 결정된 구조
  - 영국 옥스퍼드대학 콜먼교수(David Colmane)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코리아 신드롬 발언
  - 콜먼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이 심각한 저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백년도 안 되어 현재의 절반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2305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단 500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언급
- 인구의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더욱 빠르게 진행
  - 한국의 출산율 변화의 두 가지 특징으로,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간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장기 지속된다는 점과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 ※ 고령화 진전 속도: 노인인구 비율 7~14% 도달기간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발생시킴
  -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재정악화, 가족구조와 사회관계의 급격한 변화

-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을 고비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편, 정부의 부채규모가 GDP의 300%를 초과(IMF, 2008)
  - 양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저출산·고령화 속에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서 핵심적 과제라는 데 모두 공감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
- 문제제기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두가지 접근법 구분: 경제정책적 접근, 사회정책적 접근
  - 앞서 언급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주로 경제정책적 접근으로, 발전, 성장, 효율의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이고, 원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정적 효과의 대체 방법에 초점
  - 다른 한편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의 우려로서, 원인에 대한 사회적 치유에 초점
  - care risk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메가크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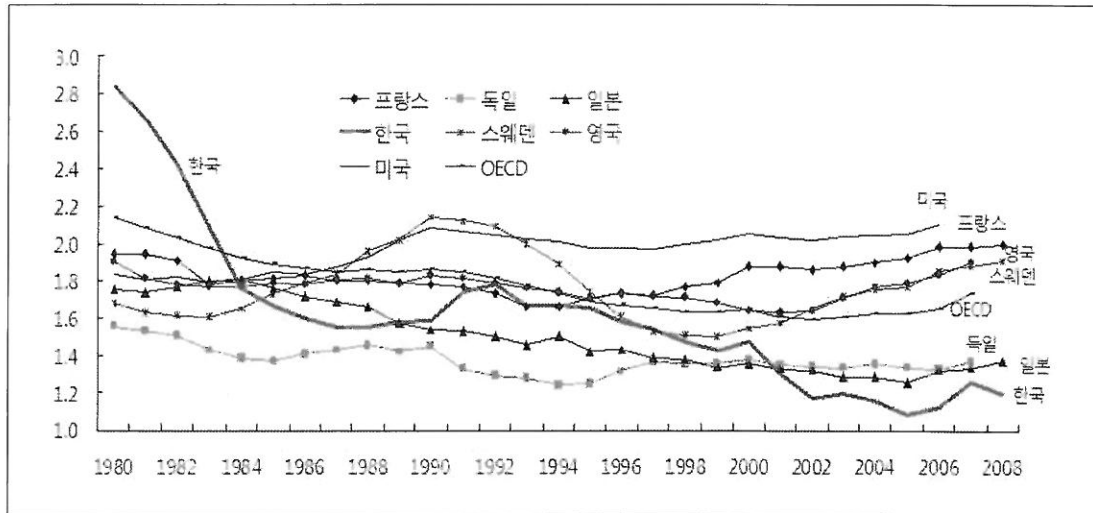
## 2. 정책 및 여건 변화

### 1) 시대적 전망과 여건변화

-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 추세
-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하나의 큰 경향성을 형성하였는데, 특히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출산율 하락의 일반적 추세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국가들은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이하 출산율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1.3 이하 초저출산 국가가 확산
  - 최근 몇 년간 주목할 점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주요국가(북유럽국가와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 이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효과로 판단됨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이후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2001년 이후 1.3명 이하 초저출산수준이 지속, 현재까지 26년 장기지속
- 2005년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역사상 유래 없는 수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1.2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전환으로 판단

하기는 이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OECD,

Statistics([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

□ 저출산 추세와 관련된 인구변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구 규모의 감소라기보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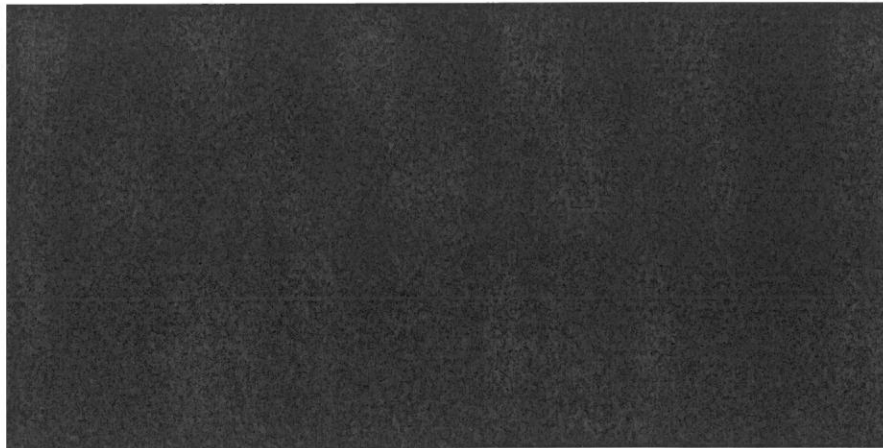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음. 그러나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분명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질 것
- 전체 인구의 30%, 40%, 또는 5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그 때의 사회체계는 현재와 총체적으로 다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

□ 2012년 우리나라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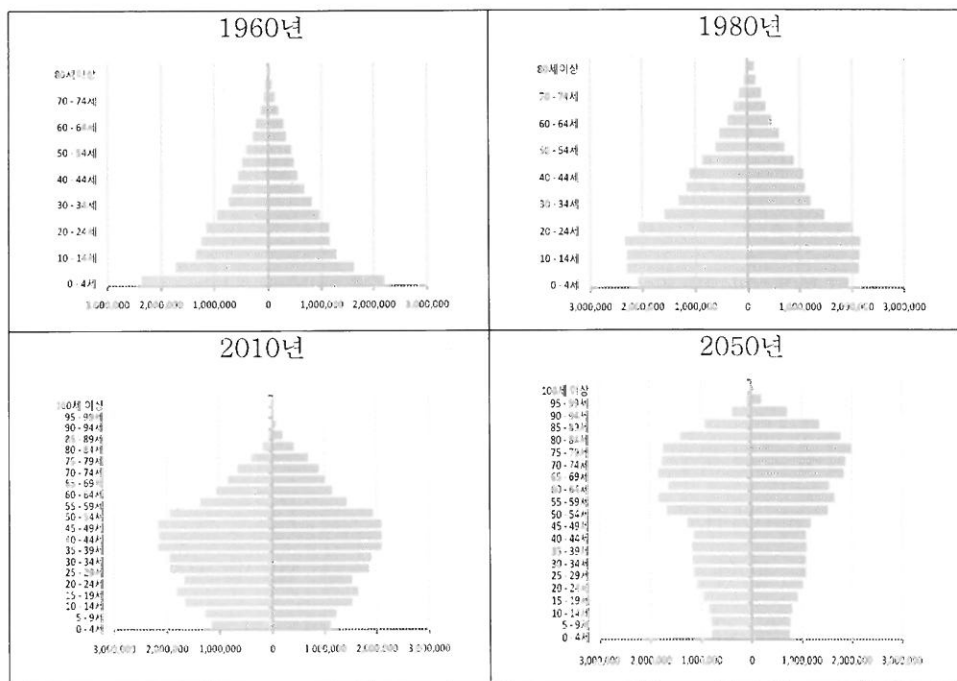
- 현재는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8.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 노인인구 7%에서 24%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26년으로 예상되며, 일본 36년, 프랑스 155년, 독일 78년, 이탈리아 81년, 미국 88년에 비해 매우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고령자의 고령화도 중요한 추세중 하나로, 전체노인 중 중기(75~84세), 후기노년층(85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즉 85세 이상 후기 노년층이 2010년에는 7.0%에서 2030년 10.5% 2050년에는 20.9%로 예측

- 인구구조가 고령화될 때, 노인의 건강보장과 연금 및 노인복지 등에 많은 사회보장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산업구조 조정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

[OECD 회원국의 노인인구 비율]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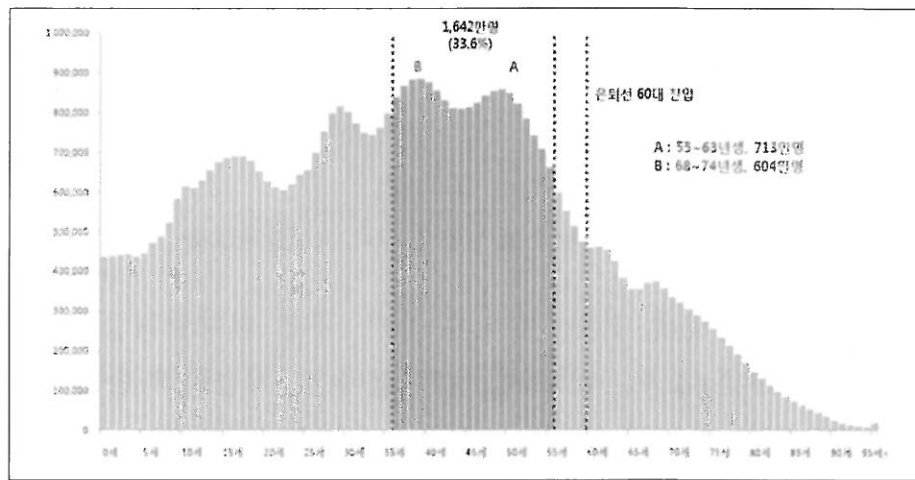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추계인구, 2005.

□ 베이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

- 1차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713만명, 2차 베이비부머 1968~74년생 604만명
- 일반기업에서 55세에 정년퇴직한다면 2010년부터, 60세에 정년퇴직한다면 2015년부터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게 됨
- 노동시장을 빠져나갔을 경우 이들에 대한 일자리문제와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여가활동과 각종 사회참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질 것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구조]



□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관한 해외사례

- 사민주의적 접근(스웨덴을 중심으로): 공적보육서비스 체계화, 남녀평등에 기반한 일가족양립시스템 확립
  - 육아휴직제 활성화와 함께 육아휴직의 Papa Quota 제도, Speed premium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지원
- 보수주의적 접근(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심):
  - 프랑스의 경우 육아지원을 위한 대규모 현금지원과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
  - 독일은 나치시대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가족가치에 관한 전통적 태도를 유지하다가, 2005년과 2007년에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사민주의 접근으로 정책방향 선회
  - 이탈리아는 남부유럽국가들의 전형적 형태로 분류되며, 전통적 가족가치와 카톨릭 교회의 보수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미흡
- 자유주의적 접근(영국, 미국 중심)
  -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의존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석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필연적 귀결
-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과 사회정책적 접근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주의적 접근은 경제성장과 노동인력의 부족, 그리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둠
  - 사회정책적 접근은 저출산 원인에 대한 해결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돌봄 위기(care risk)에 문제의식을 두고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에서 부양과 재생산의 국가(사회) 책임의 강화에 초점을 둠

2)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 공유와 대응

-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부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인구억제의 성공사례로 평가됨
-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전까지도 정부의 공식적 정책방향은 출산억제 기조를 유지
- 1996년에 들어 공식적으로 출산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수정
  - 1995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1996년 정부가 위원회 건의를 수용하여 정책방향 수정(이삼식 외, 2005)
-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컸고,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함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설치하고, 기본법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 수립 및 시행
- MB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제1차 기본계획의 내용의 보완판을 발표
- 2010년 제1차 기본계획의 완료와 함께, 2011년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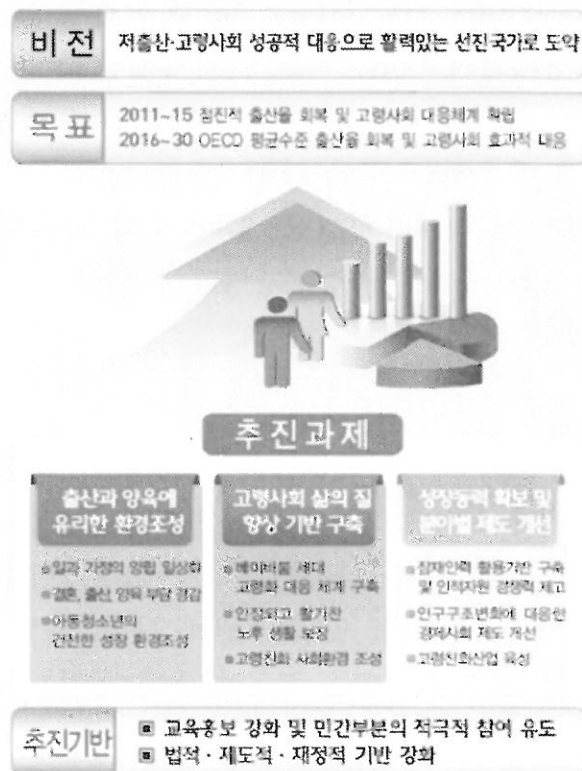
□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의 평가

- 1차 기본계획은 범 정부 차원의 최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

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기본틀과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

- 반면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정책의 내용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서지 못해,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정책 분야를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조]



- 최근 정부는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5세아 보육 및 교육지원 범위를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청년인적자원 개발,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이 강화되고 있음
-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2012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하여,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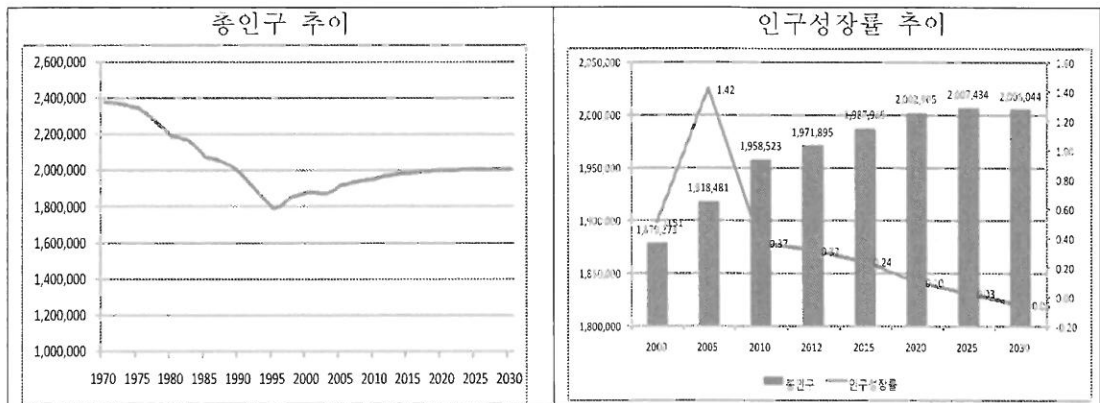
- 향후 보육서비스의 공공화 논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지자체 정책에서 일가정 양립정책분야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의 정책방향에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충남의 여건변화

#### □ 충남의 인구학적 특성

-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1970년에 2,379천명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5년 1,784천명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2012년 현재는 1,971천명
- 향후 추세는 지속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5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9년에 2,000천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충남의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추계인구, 2005.

#### □ 충남의 노인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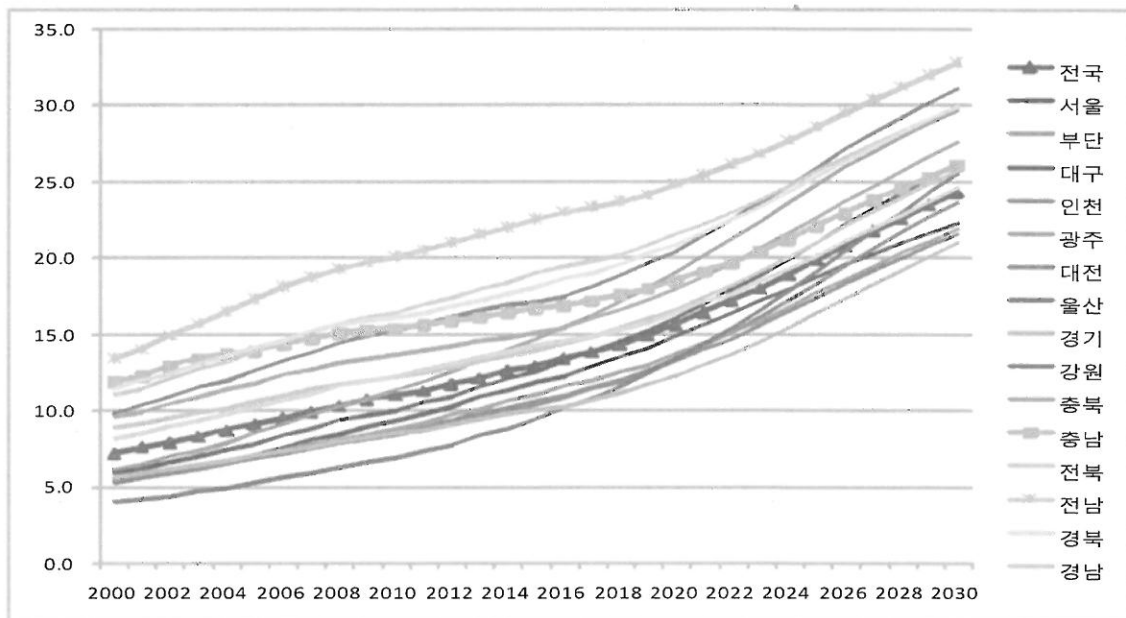
-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000년의 경우 전국 노인인구는 7.2%였으나, 충남은 11.9%를 나타내 4.7%p 더 높은 수준이었음
  - 2012년 현재 전국 노인인구는 11.7%인 반면 충남은 15.9%로 4.2%p로 지난 10여년간 격차가 크게 변하지 않음
  -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16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높았으나, 2012년 현재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30년에 전국 노인인구는 24.3%인 반면 충남은 26.1%로 격차는 1.8%p로 감소할 전망



#### □ 충남의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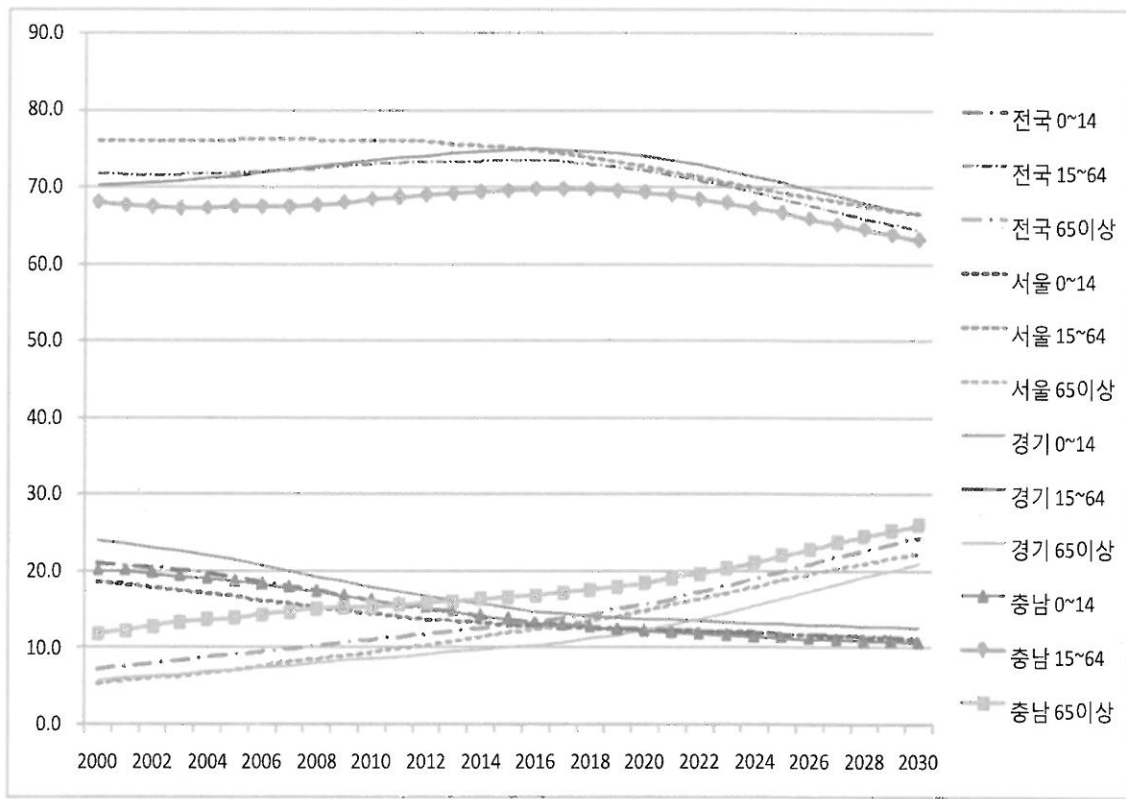
- 충남 인구구조는 다른 주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로 보기 어려움
-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전국수준에 비해 낮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낮으며, 이런 경향은 향후 2030년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수준에 비해서 높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도 높으며, 역시 이런 경향은 향후 2030년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 다만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국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이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전체적으로 충남의 인구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



자료: KOSIS, 추계인구, 2005.

[충남의 인구구조 변화]



자료: KOSIS, 추계인구, 2005.

#### □ 충남의 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상위 두 번째를 기록. 전남 1.54에 이어 충남이 1.4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합계출산율은 1.15에 비하면 큰 차이라 평가할 수 있음. 최근 몇 년간 이 순위는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은 낮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2010년 평균 1.7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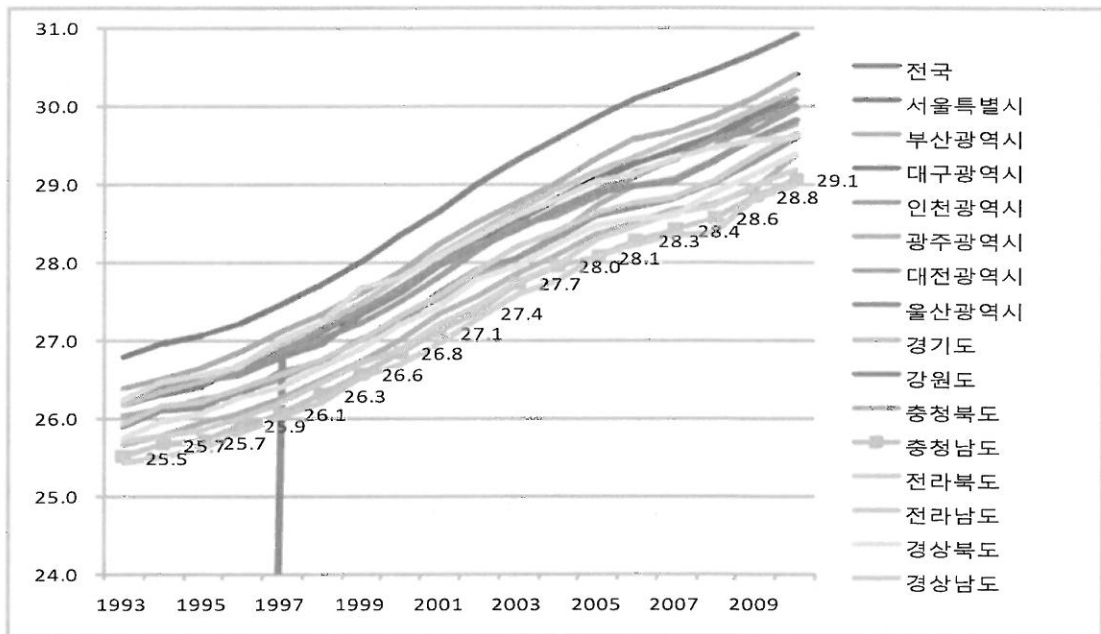
[충남의 합계출산율 추이, 1997~2010]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연령을 보면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첫째아를 일찍 출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경향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음
-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분명
- 다른 지역에 비해 충남지역에서 현재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혼인연령도 낮고 첫째아 출산연령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첫째아 출산연령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29.1세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늦은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연령]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 □ 가임여성 인구의 구성

- 15-49세 가임여성의 연령집단별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의 20-24세 연령집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현재 전국 수준이나 서울 또는 경기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 그러나 이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5-29세 연령집단은 2012년 현재 전국,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에는 더욱 그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또 다른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집단은 2012년 현재 전국, 서울, 경기도보다도 모두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이런 추세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가임여성 규모가 감소하면서 향후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출생아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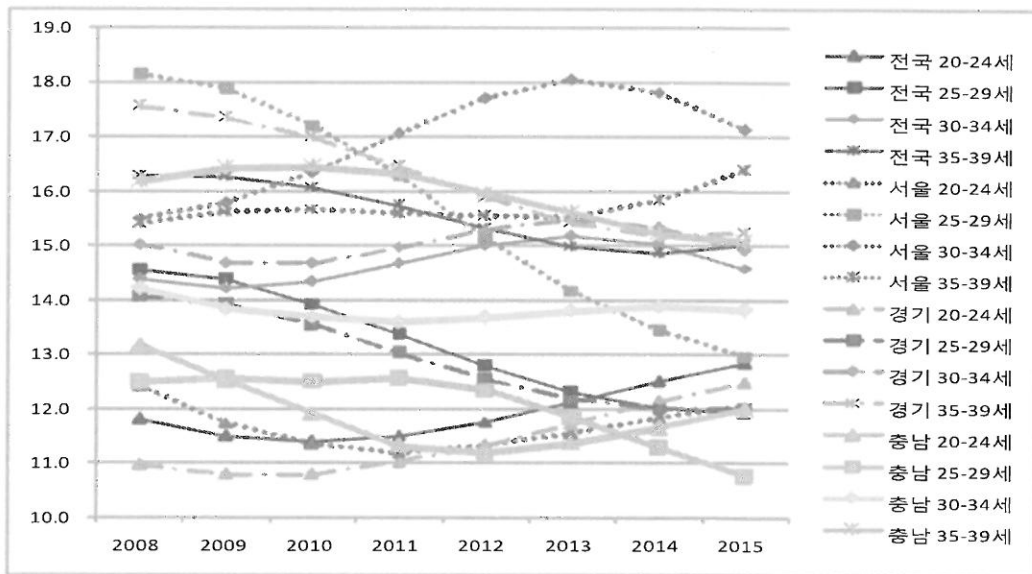
#### □ 전체 출생아수 중 연령 집단별 출산의 비중

- 충남에서 당해연도 총 출생 중에서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 비중이 2000년경부터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음. 이는 최근 10년 동안 충남의 높은 출산율이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비중이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주출산 연령층 20-39세 중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또다른 연령집단은 20-24세 연령집단
- 따라서 충남이 전국수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20-29세 연령

집단이 전국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출산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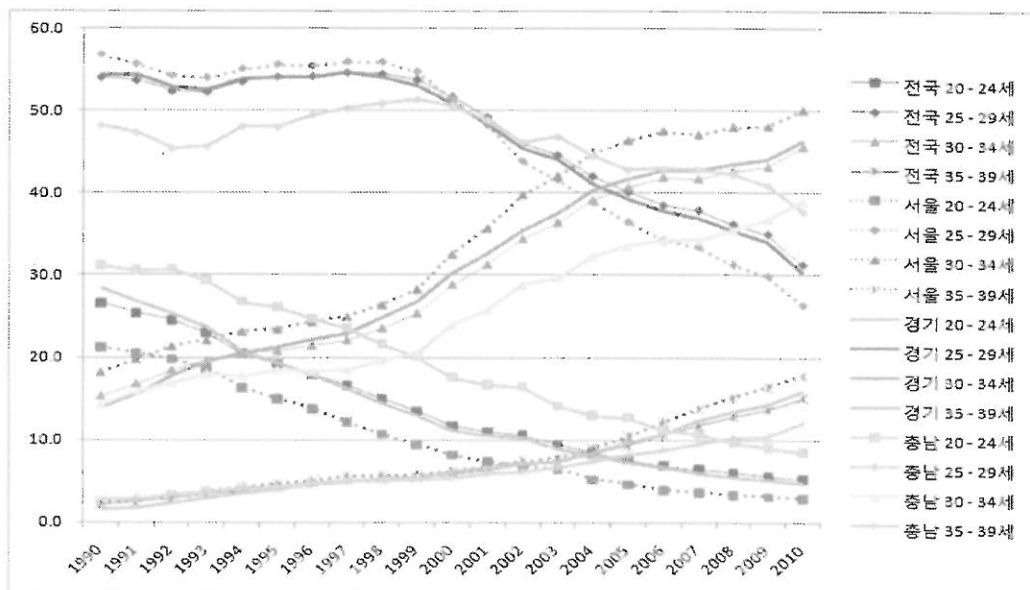
-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2010년에 처음으로 30-34세 연령층의 출산비중이 25-29세 연령층의 출산 비중을 앞질렀다는 점
- 이것은 충남에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낮은 출산의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향후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가임여성 중 주 출산연령층의 구성비]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전체 출생 중 주 출산연령층 출산의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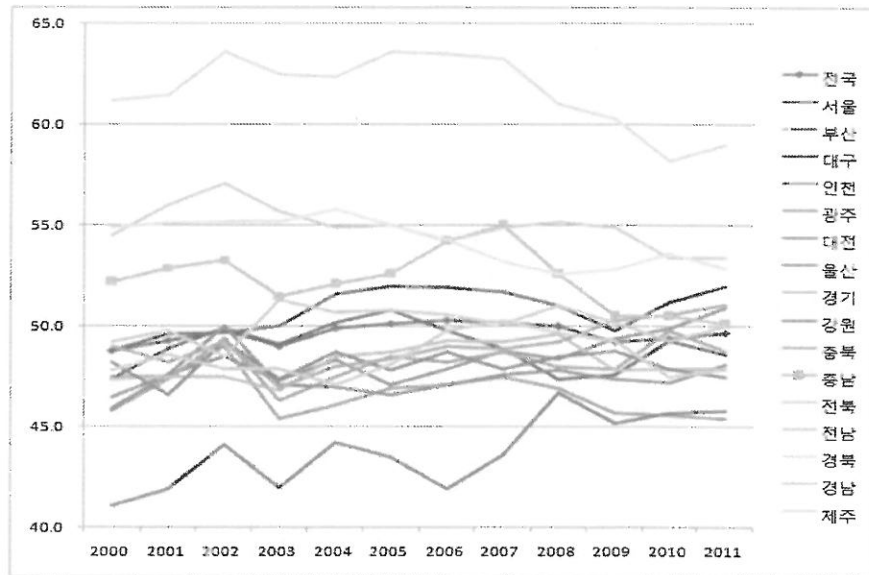
□ 가임여성 연령집단의 인구 이동

- 여성 연령별 순이동에서 주출산연령인 25-29, 30-34세 연령집단에서 전출보다 전입이 두 연령층 중 한 연령층이라도 1% 이상 많은 지역은 울산과 경기뿐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여성경제활동의 특성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전국 수준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서 종사상지위별 구성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전국 여성 중 71.2%, 충남 여성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59.9%
- 이는 충남 취업여성 중 약 40%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로써, 전국 수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출산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 비율]

구 분	전국여성	충남여성
전 제	100.0	100.0
자영업주	16.9	19.4
무급가족종사자	11.9	20.4
임금근로자	71.2	59.9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성인지통계DB(이창익, 황창연, 2010: 24 재인용).

## 나.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평가

-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남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매우 미흡
  - 2010년 충남의 광역단위 자체사업은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공모전 실시 2개 사업뿐(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2010)
  - 2011년 실적에 따르면, CEO 포럼, 아이낳기 좋은세상 공모사업, 충남 다사랑 카드 운영 및 홍보, 임신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조례 제정, 가족사진 공모,
    - 셋째아 이상 무상 보육 교육 추진을 위해 “만 5세아”를 셋째출생아“ 이상으로 전국 최초 전환 추진, 총 46억원 집행
    - 종사자 처우개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수당, 교재교구비 지원, 영유아 급간식시비 지원 등
  - 충남은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정책이외의 자체 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의 큰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위를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3. 충남의 정책방향

### 1) 기본 방향

- 충남의 지역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충남브랜드 정책을 개발
  - “서울형 어린이 집”이나 경기도의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과 같은 독창적 정책을 개발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출산의 정서적 메커니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시작될 수 있음. 지방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이 행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충남의 지역(인구)환경을 반영
  - 지자체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만 그것이 가능할 것

- 충남은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 현재의 출산율은 높은 수준이나 인구대체수준에 미달하고 국제적 수준에도 미달
  - 첫째아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가임여성 규모가 감소함으로, 향후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출생아수 규모 감소가 우려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아, 아동양육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향후 적극적인 출산친화적,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

- 복지 논쟁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곧 다가올 미래는 복지(특히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이에 대비한 재정계획, 정책적 대안, 주민의 욕구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청년층 지원 대책도 저출산 고령화 관점과 연계하여 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확대해야 함

#### □ 기존 정책의 평가를 반영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체사업의 비중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충남만의 문제는 아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하여 향후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경제주의적 접근보다 사회정책적 대응에 집중

- 저출산 고령화를 인구 규모의 문제, 출산율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 국가재정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원인에 대한 고찰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 한계를 노출함
- 출산행위는 경제적 행위이기에 앞서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사회(가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족을 둘러싼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을 두루 고려해야 함
- 특히 현대의 사회체계에서는 기술과 정보의 발달, 시장의 세계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 등에 의해서, 가족(사회) 구성원의 부양을 가족단위에만 위임할 수 없는 게 현실
  - 여기서 가족돌봄체계의 붕괴 위험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가족은 그동안 막대한 부양책임을 홀로 떠안았기 때문에, 과중한 피로감에 쌓여 있고, 이제 부양의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4. 핵심프로젝트

##### 1)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공립 어린이집 확충)

###### (1)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대책에서 핵심은 보육과 일가정양립정책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음
- 근대화과 산업화 초기에 가족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무는 전적으로 가족 내에 위임됨으로써, 누적된 현재의 가족(아동) 부양부담이 출산의 억제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64%가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 자녀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사업은 2012년 목표가 31개소로, 이 중에서 신축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장애아 전담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19개소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2012년 사업목표가 10개소에 불과

###### (2) 주요내용

- 충남 공공형 보육시설 모형개발 및 시범운영(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2010)
- 학교 공간을 이용한 보육시설 설치, 농어촌 유희시설을 이용한 보육기능 보완 등의 방법으로 공립어린이집 확충(최은희, 2010)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 일시보육, 시간 연장보육, 상담 및 정보제공, 장난감 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 보육 복합센터 설치(최은희, 2010)
- 현금지원 정책보다 시설과 인력 및 프로그램과 같은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3) 기대효과

- 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
- 자녀 양육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2) 아동 교통 수단의 공공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각종 아동 관련 안전사고 및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은 미래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비를 위한 핵심과제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의 이동과정의 공간적 시간적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이 이동하는 경로를 책임지는 교통수단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 지자체 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등에 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및 관리 책임 부여
- 운전 기사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정기적으로 적당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

### (3) 기대효과

-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 자녀 양육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공공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3) 청년 가족구성 지원

### (1) 배경 및 필요성

- 출산율 감소의 일차원 원인은 만혼화 때문인 것으로 지적됨
- 청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직업과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수립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기 결혼할 수 있는 전세자금의 필요성 제기
- 현재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기금 이용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더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
- 또한 국토해양부는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이 발생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중

### (2) 주요내용

- 충청남도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등의 이용기회를 파격적으로 부여
- 현실적인 전세자금의 지원 또는 대출 지원

(3) 기대효과

-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통한 혼인과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

4)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제도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일가정양립정책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많지 않은 실정
- 이 중에 현재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주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 부담되는 측면이 많음.
- 실질적 인센티브가 미약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진하고, 대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참여하는 실정
- 그러나 현재 일가정양립 정책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 기업부분으로, 기업의 참여정도에 따라서 가족친화환경이 큰 영향을 받음
-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후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립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
-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자체 인증제도를 통하여 출산 친화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충남도에서 자체평가를 통하여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
- 가족친화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기존에 개발된 평가기준을 보완사용할 수 있음
- 평가 항목은 가족친화적 환경과 제도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가능성, 사용자비율,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 등 임신부와 출산여성의 편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
-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고려

(3) 기대효과

- 지자체 차원의 일가정양립정책의 모형이 되어 기타 지자체의 수범사례
- 가족친화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에 기여
-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의 발전에 기여

참고문헌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012.  
충청남도, 민선5기 충남비전, 2010.  
충청남도,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수립, 2010.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김한곤, 1993,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삼식 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익, 황창연, 2010,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최은희, 2010, 충남 농어촌 보육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